

5·18 때 광주일보 검열하듯 언론 철저히 통제하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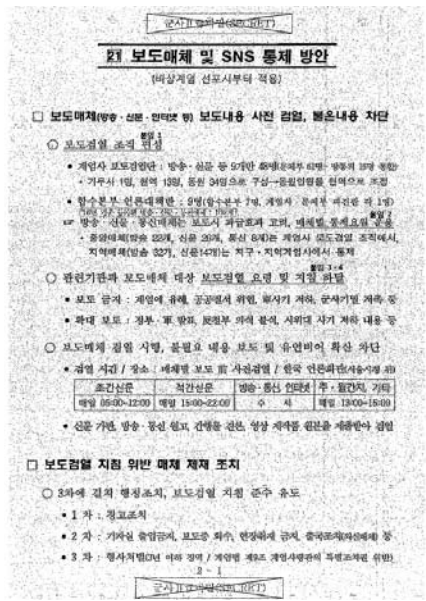
국군기무사령부가 작년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에는 계엄 선포 시 미국 정부로부터 계엄 인정을 받도록 외교적 조처를 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내용이 드러났다. 주한 외국공관단을 소집해 계엄 시행의 지지를 당부하는 등 계엄 시행에 따른 부정적인 내용이 외국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방부는 23일 작년 3월 기무사 작성 계엄검토 문건(A4용지 8페이지)에 달린 군사 2급비밀 '대비계획 세부자료'(A4용지 67페이지)를 평문으로 분류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세부자료 문건을 보면 기무사는 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으로 국방부 장관은 주한 미국대사를 초청해 미국 본국에 계엄 시행을 인정토록 협조하도록 했다. 1980년 5·17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조치를 취하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이를 인정받으려 했던 사례를 연상케 해 충격을 주고 있다.

계엄사령관은 주한 무관단을 소집해 계엄의 불가피성과 신속한 사회질서 확립 등 계엄 시행 지지를 당부하도록 했다. 외교부 장관은 주요 국가 주한사절단(7자·기업인 포함)을 초청해 국내 상황이 왜곡돼 보도되지 않도록 협조하면서 계엄 시행 지지를 요청토록 했다. 외국 공관 대상 경계 강화 지침(국내 주둔 외국인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본국 철수를 사전 방지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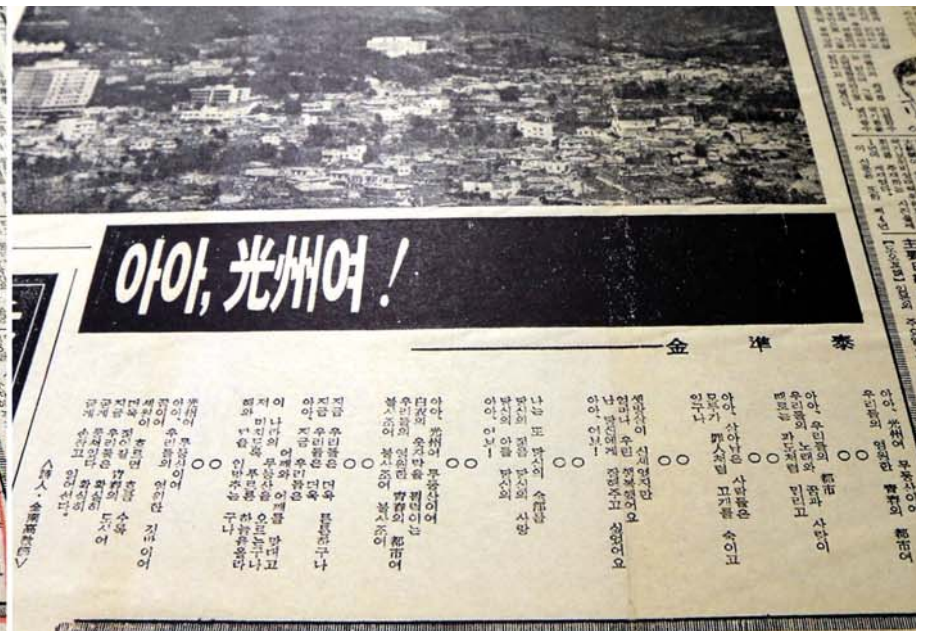
계엄 선포 후에는 언론언어 등을 유포하는 인터넷 포털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폐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에 포함된 '보도매체 및 SNS 통제 방안' /연합뉴스



지난 1980년 5·18을 전후해 신문부는 광주일보의 전신인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을 상대로 검열을 시도했다. 사진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직후인 6월 2일자 전남매일 1면에 실린 김준태 시인의 '아이,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라는 시가 계엄군의 검열을 당해 빨간 펜으로 그어진 모습(왼쪽)과 검열을 거쳐 실제로 배포된 신문의 모습.



미국에 인정받고 국회·언론 통제하려 치밀한 계획

국민 여론 유포하는 인터넷 포털·SNS 계정 폐지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직권상정 차단 방안도 강구

민·관·군 합동으로 '인터넷 유언비어 대응반'을 설치해 불온내용 식별 시 신속하게 차단하는 등의 대응책도 마련했다.

신문 기반, 방송·통신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 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하는 등 사전에 언론을 장악해 통제하려는

조치도 담겨 있다. 대비계획 세부자료 중 예시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선포권자는 '대통령(권한대행)'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계엄령 선포권자를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 변경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건 작성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직권상정 차단 방안도 강구하도록 했다. 기무사 세부자료는 '당·정 협의의 통해 국회의원 설득 및 계엄해제 건 직권상정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 '여당을 통해 계엄의 필요성 및 중단 기간 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며, 당·정 협의의 제한 시 (계엄)해제 요구안 직권상정 차단 방안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다. 이어 '합수단은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을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하는 방법으로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국회 장악 대책도 마련했다.

계엄 선포 시 총기 및 폭발물 탈취 예방 조치도 구체적으로 수립했다. 전군 탄약·총기관리 강화 등을 철저히 하고, 민간 총포사와 화약류 제조업체, 사격장 등을 폐쇄 조치하며, 해외로부터 총기·폭발물 등 밀반입자를 엄정처벌하는 내용 등으로 구체화했다.

계엄사령부 설치 장소로 B-1 문서고 등 7개 장소를 검토하고 각각의 장단점도 명시했다. 기무사는 수도방위사령부의 B-1

문서고가 공간, C4체계, 위치, 경제, 지원 시설 등 계엄사령부 구성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최적의 장소로 꼽았다.

이 밖에 계엄사령관으로 육군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합참 차장 등으로 검토한 결과, 육군총장이 "지구 계엄사령관 통제 및 계엄업무 수행권 운용 가능, 군사대비태세와 구분해 임무 수행 가능"해 적합하다고 명시했다. 합참차장이나 군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대비해야 한다는 명목 등으로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연합뉴스

'국회 무력화' 시도... "쿠데타 시도로 볼 대표 사례"

기무사 계엄문건, 계엄실무편람과 차이점

작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과 합동참모본부의 계엄시행 지침인 계엄실무편람과의 결정적 차이는 '국회 무력화' 시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부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보면 계엄시행 중 국회의 임시의회의를 소집해 제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시도할 수 있고, 당시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면 계엄해제가 가능하다고 언급돼 있다.

심지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에 대비해 299명의 국회의원을 진보성향 160여명, 보수성향 130여명으로 구분하기도 했다. 기무사는 우선 여당인 당시 새누리당을 통해 계엄의 필요성과 중단기간 내 해제 약속을 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을 세

계엄해제 못하게 현행법 처리 국회의장 직권상정 차단 방안도 실행 의도로 치밀하게 작성한 듯

었다. 불법시위에 참석하거나 반정부 정치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을 검거한 후 사법처리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야당 의원이 계엄해제 표결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현행법으로 사법처리한다는 구상이었다.

국회의장의 계엄해제 안전 직권상정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문건 작성 당시 국회의장은 정세균 전 의장으로, 기무사는 정 전 의장을 따로 설득하거나 최악에는 다른 야당 의원들과 함께 사법처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합참이 같은 날 공개한 계엄실무편람에는 이처럼 국회를 무력화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 군사자료인 계엄편람은 계엄업무 담당관에게 계엄의 개념과 계엄법을 이해시키고, 계엄시행 때 지구 및 지역 계엄사령부에 계엄시행의 기본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2년마다 발간된다.

헌법학자들은 기무사 계엄문건에 등장하는 국회 무력화 계획은 위헌적이며, 심지어 기무사 문건을 쿠데타 계획으로까지 볼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는 입장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야말로 명백한 헌법 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이라며 "헌법에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중 하나로 계엄선포권을 규정하고 있고 계엄이 선포되면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국회에 대해서는 그런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헌법은) 전쟁 때도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계엄시행 중) 국회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폭력이다. 내란죄의 기본요건인 '국헌문란'의 대표적인 사례다. 국회 관련 부분은 (기무사 계엄문건이) 일종의 쿠데타 시도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계엄시행 중 보도검열단 운영과 보도검열을 위반한 언론사에 대한 조치도 기무사 계엄문건과 합참 계엄편람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기무사 계엄문건에는 보도검열 지침을 지속해서 위반하는 매체는 등록을 취소하고 보도정지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합참 계엄편람에는 언론 및 출판기관의 존립 자체에 영향을 주는 조치는 계엄사령관 특별조치의 한계를 초월하고, 이런 조치는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김용희 기자 kimyh@연합뉴스

기무사령관 "송 장관에 계엄령 문건 위중한 상황 보고"

송영무 "지휘 일반 보고 받아"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은 24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 "3월16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위중한 상황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 '송 장관에게 보고할 때 송 장관이 바쁘니까 놓고 가라고 했는데 맞느냐'는 자유한국당 서정원 의원의 질문에 "장관이 위중한 상황으로 인지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 사령관은 '송 장관 보고서 사안이 엄중해서 앞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고 대통령 보고 사항이라고 했느냐, 아니면 기초자료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라고 보고했느냐'는 서 의원의 질문에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고 위중한 사항은 당시에도 인정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 장관은 이 보고와 관련, "5분 정도 보고를 받았다. 그 문건이 아

니고 지휘 일반 보고를 받았고 이것(문건)은 두꺼워서 다 볼 수 없으니 놓고 가라고 했다"며 "그날 일정이 바빠서 다 끝난 다음에 퇴근 하기 전에 봤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꼭 해야 하는데 (그때는) 오픈시킴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그때 지방선거운동도 있고 남북대화도 있고 밝힐 수가 없어서 지나가면 확실한 수사를 시킬 예정이었다"고 답했다.

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두 사람 진술이 엇갈리자 "이 사령관은 송 장관에게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할 정도로 보고했다고 하고, 송 장관은 이 사령관에게 그냥 놓고 가라고 했다고 한다. 왜 거짓말을 하는가"라고 추궁했다.

송 장관은 이에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다. 저는 증인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기무사 개혁방안과 관련, 명칭이나 소속 변경 등 근본적인 조정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의 새 이름

신세계안과

SHINSEGAE

스마일 / 라식 / 라섹
노안 / 백내장

故 유수만 선교사 | 추모예배

(Dr. Dick H. Nieuwsma)



1963년 치과의료선교사로 광주기독병원에서 부임한 이래 1986년 한국을 떠나기까지 수많은 환자를 특히 소외받고 가난한 자들을 중심으로 열과 성을 다한 의술을 베풀었으며, 동시에 치과 의사 교육에도 힘을 써 광주기독병원 치과수련과정을 통하여 많은 제자들도 배출하였고, 열방을 통한 선교목적으로 1982년 치과 의료선교회를 설립하였으며, 또한 남광교회의 장로서 시무하였던 유수만선교사께서 2018년 7월 7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미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이에 광주기독병원치과동문회와 남광교회는 고인께서 생전에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되새기며 그분의 삶을 귀범으로 삼고자 하는 다짐으로 추모예배를 드리고자 하여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예배안내
2018년 7월 28일(토) 17:00~18:00
남광교회 ☎062-225-2511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안길 31



공동주관 : 광주기독병원치과동문회(회장 이일우) / 남광교회(담임목사 정영철)